

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로 지역경제 청사진 조성

일자리 안전벨트 메고 신산업 엔진 시동

전북도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 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전북경제의 청사진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고용안정사업단의 공식 구성 전에 일자리경제정책관을 중심으로 TF팀을 우선 구성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추후 5월중에는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총괄사무국을 자동차융합기술원 내에 설치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고용안정사업단장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이 겸직하게 되며, 2명의 파견 공무원 및 민간인 7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5년간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의 총괄 관리 및 새로운 일자리 거버넌스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기존 중앙의 정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3개 시군에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60억원)을 조성·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청년층 지역정착(청년장학금, 생활자금 이자보전, 주거지원 등), 선택적 복지지원(지역화폐 연계) 등을 통해 취업자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촉진해 패키지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역대 고용부 사업 중 최대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산업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고, 유능인력의 이·전직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산업 신일자리 창출프로젝트는 연 1만명씩 전라북도를 빠져나가는 청년유출문제를 완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중앙정부 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협력업체의 위기와 지역 제조업 연쇄 도산으

로 수직계열 구조 완화 및 자생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안정화를 지원한다. 총 211억원, 일자리 854개 창출에 △고용안정/채용유도형 사업다각화 제품개발 및 고급화 지원사업 △고용안정 촉진 거래선 다각화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창출 기반 보유기술 활용 증설·분사창업 패키지 지원이다.

프로젝트 II는 농식품산업 혁신·고도화로 지속 성장 산업인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 판로다각화, 생산의 스마트화를 통한 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며 총 210억원,

프로젝트 III는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 고용서비스망 및 고용안정 선제대응 브릿지 구축으로 전북경제 중심축인 3개 시군의 고용안정 Safety Belt를 구축하여 고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총 388억원, 일자리 6,462개 창출에 △전북 고용안정사업단(총괄사무국) 운영 △시군별 고용안정 선제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전북형 기술·고용연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일터혁신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생산현장 체질강화 지원이다.

업체의 위기와 제조업 연쇄도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가운데, 전 도민이 힘을 모아 고용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또 한 번의 심각한 고용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전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외전 마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익산시는 벼솔론, 동우화인켐, 축력 등 제조업 113사가 연쇄 도산하여 실업자 수가 2018년 대비 5천명이 증가하고 2015년 대비 1만4,200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

김제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자동차 실적악화로 인해 지역내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어 한국GM 협력사 4개사 폐쇄 등 주력산업위기에 따른 일자리감소로 고용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완주군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대수가 급감(2015년 대비 1만9,464대, 30.7%)함에 따라 2020년 20~40%(1,000~2,000명) 인원감축이 예상되는 등 현대자동차 생산대수 감소로 촉발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완주군 전 산업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고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익산, 김제, 완주 3개 지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하여,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 각 참여 시군, 도내 혁신기관들의 속의 끝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假 제안을서

지난해 11월 8일 고용부에 제출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심층컨설팅과 지역 일자리 자문단과 거버넌스를 재구성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 십 차례의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현장의 애로를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사업의 한계점들을 해소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고용환경 개선, 창업지원 등 새로운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고용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전문가, 통계전문가 등 지역의 역할을 충 동원했고, 중앙 단위의 일자리정책 자문단 및 전문가의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전라북도 노사 민정 협의회에서의 전북도 노사 민정 협의회에 제출했으며 고용노동부 발표식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2월 우선 협상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발표 식사에 송하진 지사가 직접 참석, 지역고용 위기상황의 심각성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절박한 심정으로 설명해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3월~4월에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례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4월 21일 선정됐다.

이번 공모선정은 제안서를 제출했던 전국 19개 컨소시엄 중 5개 컨소시엄만 선정되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뿔고 대규모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사업계획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업무협약도 이런 맥락에서 5개 지자체 중 전북도가 대표로 고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후문이다. /김진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정 대응 위해 일자리경제정책관 중심 TF팀 우선 구성

익산·김제·완주와 더 좋은 일자리 기금 60억원 조성·지원 고용유지 촉진

고용 안정화·더 좋은 일자리 확대·고용 서비스망 구축 등 위한 4개 프로젝트 추진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김제시·완주군에 위기산업, 고용성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 10,0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지역 고용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전북도, 익산시·김제시·완주군은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별 구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 안정화·더 좋은 일자리 확대

먼저, 프로젝트 I은 상용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협력사의 자체경쟁력 확보(거래선 다각화), 대

일자리 1,741개 창출에 △전북 식품산업 고용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미래 농생명 ICT 융합형 취창업 지원사업 △기업지원형 로컬푸드 급식 취창업 플랫폼 등이 있다.

▲신일자리 창출·고용 서비스망 구축

프로젝트 III는 미래형 자동차 新기술산업의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자동차기술기반 ICT·수소융합 신산업 육성을 양질의 신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총 191억원, 일자리 943개 창출에 △신산업 기업유치/집적화 지원사업(익산·김제·완주 공동사업) △전북 신산업 채용연계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전북 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연계형 기업지원사업이다.

▲사업계획 전국 최고 수준, 가장 많은 예산 확보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고 확산방지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상황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

2020년 2월 전북지역 제조업 BSI지수는 57로 전월대비 6포인트가 하락, 3월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7%가 감소한 62.9%를 기록, 취업자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4,000명이 감소한 90만 7천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2020년 1/4분기 청년층(15~24세) 고용률 역시 30.3%로 전년 동기 대비 1.3%p 하락했고, 2011년 1/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7년 이후 자동차 협력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체 안돼”

성경찬 도의원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고 사회정의의 바로 세우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의원은 27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위해 전라북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 인력 확충 필요”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이 27일 제3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는 보건·위생 분야 전문인력 구성 수 14위, 전문인력 수 10위로 조직 및 인력구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를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으로 한정하면 더욱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 전북의 경우 전주 형무소 사건, 남원 대강면 강석마을 소개(疏擧) 사건, 이리역 폭격 사건, 보도연맹사건 등 1950년부터 1963년까지 공보처에서 조사한 민간인 희생자 수는 총 54,678명으로 전체14.6%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남도(22.5%)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하지만 전북도 지역의 한국전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인희생을 추념하는 시설도 5곳에 지나지 않으며, 시설 또한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발굴한 67기 위령사업 중 당장 시급한 사업들부터 시작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열악해 도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는 감염병관리 한 곳으로 매우 열악하고 지원부서인 감염병관리지원단마저도 전북대 병원에 위치해 대응 조치가 곤란해 있다. 또한 도의 역학조사관들이 시·군의 역학조사 업무까지 관할하고 있어 업무과다에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 홍 의원은 “따라서 과 단위의 감염병 전담 부서 신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청사 내 이전,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 부작용 방지해야”

두세훈 도의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장



전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27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외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아, 초·중등 체육특기생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은 “특정 관할 지역 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동일 관할지역 내 동일 체육특기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중학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아실현 등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외 중학교로 입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두 의원은 “거주지 외 관할지역 전·입학가능 여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 해석을 놓고 전북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불가

능하다는 해석을, 반면 서울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전북교육청처럼 거주지 관할지역 외 학교로 전·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중학교의 경우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학교체육진흥법 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난 3월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결정’처럼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없이 합숙소가 폐지돼 많은 학교 체육부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삼례여중 축구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며, 통쾌한 우승감동 실화를 그린 영화의 주인공 ‘슈팅걸스’로도 제작되었고,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어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결정은 아쉬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이어 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제1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교육청 관할지역 내로 전·입학 범위를 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주지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의원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지 외로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을 인정해, 학교체육진흥법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두 의원은 “정부에 체육특기생의 전국 또는 시·도 단위 등 전·입학의 명확한 범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 개정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부에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없는 합숙소 폐지는 학생운동부 말소조치이기에 시정책을 마련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진성 기자

심의, 정부안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관련 예산이 적체적소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보하기 위해 각 실국의 행사성 경비 등을 감액한 것으로 도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처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 3851억8200만원의

도의회 환복위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27일 환경복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반영하고 가용 재원자원을 확

교육위, 교육복지 실현

의안 4건 심의·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7일 1차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유재산관리안에는 장수·완주교육문화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전북교육연구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식생활관 증·개축 그리고, (가칭)전주여의유치원 신축 변경안이 포함됐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등 통합관사 계획이 실정에 맞게 계획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관사는 도로상대가 좋지 않은 과거에 수요가 높았던 사업”이라며 “과거의 관습대로 구조·시설의 변화 없는 관사는 실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원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교원복지에 향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육은 적시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학생들의 수요가 잘 반영돼 운영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작 전부터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입을 모아 강조했다.

최영규 위원장(익산8)은 “장수·완주에 신설되는 교육문화복지시설로 지역 내 청소년의 자치역량 강화와 미래 핵심역량기 기대되는 만큼,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이 4년 만에 실현되게 됐다”며 “청소년을 위한 복합시설이 수요에만 의해 설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